

울산화학, 온실가스 규제가 “이득”

HFCs 가스 연소 통해 대거 감소 ... 교토의정서는 2004년 결정 전망

교토의정서가 미국의 비준거부로 인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마저 비준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인 4월에나 발효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월25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산업계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고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 결과와 산업계 대응과제, 배출권 모의거래 결과, 청정개발사업, 기후변화협약 대응사례 등을 논의했다.

산업자원부 김정관 자원정책과장은 “제9차 당사국총회는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거부와 러시아의 비준거부 움직임으로 사실상 큰 변화는 없었으나 외국기업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비준을 거부한 미국기업들도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이 지금부터라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의무부담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 Annex I 국가가 어떤 국가로 선정되는지, 얼마만큼의 CO₂ 감축량을 할당받는지의 합의가 안돼 비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교토의정서가 부결돼도 새로운 의정서는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교토의정서 비준과 상관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개도국의 적응지원 강화방안 및 기술개발과 이전의 역할이 강조됐으며 기후변화특별기금(SCCF), 최빈국기금(LDC Fund)의 운용방안이 합의됐다.

특히, 온실가스가 에너지와 산업공정 부문에서 각각 83.5%, 10.6%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산업부문의 우선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청정개발사업(CDM)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교토의정서가 아니라도 채택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행학습을 통해 준비해야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울산화학은 HFCs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목을 받고 있는데, HFCs 1톤은 CO₂ 1만1700톤에 해당하는 물질로 연소과정을 통해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규제가 본격화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27>